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과 탈근대적 재구성: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이 상 봉*

• 요 약 •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공간의 구성이나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면 인간과 사회 존재양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질서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라는 시·공간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었기에 공간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계기로, 사회이론분야에서 ‘공간’에 새롭게 주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즉, 이른바 ‘공간담론’이 성행하면서 ‘공간정치’, ‘장소의 정치’, ‘스케일의 정치’ 등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현상을 다루는 정치학분야에서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후기근대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국민국가의 변용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모빌리티의 증대에 주목하여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을 초래한 원인과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시·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 의미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 ‘시민권’, ‘국가적 공공성’ 등으로 제도화되었던 근대적 질서들이 공간적 변용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어 : 국민국가, 공간변용, 공간정치, 모빌리티, 시민권, 공공성

I.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인간과 사회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시대의 사회구성과 질서는 특정한 시·공간 인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

*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부교수

서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면 인간과 사회 존재양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적 사회구성은 근대적 시·공간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적 사회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국민국가’라는 정치공간은 ‘절대적 공간 인식’,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 ‘공간의 시간화’ 등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적 사회구성 및 질서가 시간이 중심이 된 ‘역사주의’와 ‘발전주의’를 앞세운 결과 공간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여겨졌다. 알다시피, 국민국가라는 주어진 공간은 시간 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빈 공간(container) 또는 배경 정도로 여겨졌으며,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시간에 비해 공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미흡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계기로, 사회이론분야에서 그동안 간과해 오던 ‘공간(성)’에 새롭게 주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와 로컬화라는 현실공간의 급격한 변용과 함께 근대이후 사회과학을 지배해 왔던 ‘역사주의’ 및 ‘발전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피로감 또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공간적 전환’ 이후 이른바 ‘공간담론’이 확산되면서, ‘문화정치’, ‘장소의 정치’, ‘스케일의 정치’ 등과 같이,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정치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현상을 다루는 정치학분야에서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한 탓에 공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미흡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간적 전환 이후의 공간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초국가공간, 생활공간, 가상공간 등의 공간들이 모두 국민국가 공간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공간적 전환은 단순히 공간에 대한 관심 축구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공간에 가려져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들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의 유효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후기근대에 들어 나타나고 있는 국민국가 공간 변용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빌리티의 증대에 주목하여,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을 초래한 원인과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국민국가라는 정치공간의 출현이 철도, 라디오, 신문 등의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모빌리티의 급증이 이번에는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를 초래하였음을 논구한다. 다음으로,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시·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모빌리티의 증대가 초래한 공간에 대한 유동적 인식은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의 복권과 재구성으로 이어지며, 특히 정치학이 공간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어 오랜 동안 견지해온 ‘방법론적 국가주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논구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과 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의 급증이 국민국가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해 가는지를 고찰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시민권’, ‘국가적 공공성’ 등 국민국가라는 공간 틀에 맞춰 제도화되었던 근대적 질서들이 위기를 맞아, 새로운 중층·다원적 공간구성에 부응하는 형태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논구한다.

II. 스케일과 경계의 재구성: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

1. 모빌리티의 증대와 스케일의 재구성

근대의 정치질서는 국민국가라는 이전에 비해 크게 확장된 스케일의 정치공간을 토대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는 정치·경제·문화 등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범위 확장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즉, 생활권을 넘어서는 광범한 영토와 수천만의 인구를 아우르는 동질적 정치공동체인 국민국가의 성립은 철도 등의 교통수단과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알다시피, 근대국민국가는 ‘영역성’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다. 중앙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 즉 경계 지워진 영토를 토대로, 국민경제, 대의정치시스템, 동질적 국민문화 등 근대성의 제도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제도화되었던 근대성은 후기(:탈)근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측면에서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존의 근대적 사고나 방법론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병리현상들이 속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탈근대 담론’들이 분출하고 있다. 다양한 탈근대 담론 가운데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화(globalization)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나 국제노동력의 유동성 증대 등에 의해 자본, 물자, 정보, 인력 등의 초국가적 이동이 급격하게 증대하는 양상을 지칭하며, 이전에 국민국가형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글로벌공간’이라는 ‘확장된’ 새로운 정치공간을 창출한다.

글로벌화를 추동하는 힘은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공간이라는 한정된 스케일에서 축적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은 글로벌 공간으로의 시장 확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지역과 부문 간의 불균등발전은 초과이윤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바, 세계적인 불균등발전을 토대로 산업화가 덜 된 지역으로의 팽창을 통해 잉여가치를 추출하려는, 이른바 신자본주의 전략이 글로벌화의 중요한 추동력이며, 이 때 초국가적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통

제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의 발전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초과이윤 추구가 모빌리티의 획기적 발전을 이끈 동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모빌리티의 발전에는 자본의 욕구가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

자본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력을 추동력으로 삼은 모빌리티의 급격한 증대는 공간의 변용, 즉 하비(D. Harvey)가 말한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초래한다.²⁾ 여기서 시간의 압축은 생산의 가속화와 자본회전속도의 단축을, 공간의 압축은 물자나 정보의 공간적 이동거리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이 유리한 생산거점이나 소비시장을 찾아 초국가적으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유연성과 가동성을 증대시킨다. 어리(J. Urry)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모빌리티 시스템은 전 세계의 생산, 소비, 이동, 통신을 조직하는 강력하고 상호의존적인 지식기반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집합인 것이다.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빌리티의 급격한 증대가 단순히 시·공간의 압축에만 그치지 않고 기존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과 재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는 그 내·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즉, 내부적으로는,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시간의 압축은 시간으로 환산되던 거리를 통해 그 통제력을 행사하던 중심부 국가권력의 이른바 ‘시간 주권’을 앗아간다.⁴⁾ 특히 IT기술에 의한 원거리 동시성의 증대는 공간적 거리를 갖대로 영역 내부를 위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와 구분 짓는 경계(boundary)를 통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던 국가권력에게 큰 타격을 안겨 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영역성은 잘 구획된 경계를 통해 유지·작동하는 바,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이동의 증대는 그러한 경계를 허물어 간다. 즉, 모빌리티의 급속한 증대는 사람, 자본, 물자 등의 초국가적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그 만큼 상대적으로 공간을 확장한다. 철도, 시계, 라디오 등의 근대적 과학기술이 ‘국민국가’라는 확장된 정치공간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면, 비행기, IT 등 모빌리티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이번에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허물어 ‘글로벌공간’이라는 더 확장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기든스(A. Giddens)의 주장처럼, 글로벌화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에서부터 시작된 공간 확장의 ‘연장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⁵⁾

그동안 국가에 의해 위계적으로 관리되던 로컬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화는 로컬의

1) 요시하라 나오키 저, 이상봉·신나경 역, 『모빌리티와 장소(원제: モビリティと場所)』, 서울: 심산, 2010, p.26.

2) D. Harvey,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Blackwell, 1996, p.246.

3) 존 어리 지음,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원제: Mobilities)』, 서울: 아카넷, 2014, p.488.

4) 외르크 되링·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원제: *Spatial Turn*)』, 서울: 심산, 2015, p.217.

5) A. Giddens, *Konsequenzen der Modern*, frankfurt: M, 1995, p.85.

자율성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화가 초래한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가 이른바 ‘분권화’로 불리는 로컬 주도권(local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글로벌화 한 자본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허물어 그 영역 내에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로컬들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재영역화’ 한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춰 세계 각지의 로컬들을 동질화해 가면서 동시에 각 로컬이 가진 차이들을 소비해 가는 것이다. 즉, 글로벌 시장이라는 통합된 관점을 토대로, 세계적 금융거래의 결절점인 ‘글로벌도시’를 비롯해 생산도시, 소비도시, 관광도시 등과 같은 초국가적 로컬공간들이 등장하며, 이러한 초국가적 로컬공간들은 특정 국민국가의 영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글로벌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 활동 범위 또한 국민국가를 넘어선다.⁶⁾ 이처럼 글로벌화가 진전할수록 로컬화 또한 심화한다는 점에서, 매시(D. Massey)의 지적대로, 로컬의 장소는 글로벌화를 통해 새롭게 생산된다.⁷⁾

이 같은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동시 진행, 이른바 글로벌화(Glocalization)는 국민국가의 위상을 크게 변화시킨다. 즉, 유일·유력한 정치공간이던 국민국가는 이제 아래로는 로컬 공간, 위로는 글로벌공간에 일정한 자리를 내주고, 세계를 구성하는 중층적 공간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된다. 요시하라(吉原直樹)의 표현처럼, “국가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 수준의 여러 네트워크에서 촉매 역할을 하며,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한 복잡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⁸⁾

근대적 공간구성이 내부에 로컬들을 위계적으로 포함하는 내셔널 간(inter)의 관계, 즉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 탈근대의 새로운 공간구성은 로컬·내셔널·글로벌 스케일의 중층적 공간들이 서로 넘나드는(trans) 관계, 즉 트랜스·로컬, 트랜스·내셔널(trans-local, trans national)의 공간구성을 나타낸다. 각 스케일의 공간들이 서로 넘나들며 중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구성은 공간에 대한 유동적 사고를 촉진한다. 즉, 중층적 공간구성은 각기 다른 스케일의 공간들이 가진 상대적 특징과 이들 간의 관계를 유동적으로 파악해야할 필요성을 제고하며, 이러한 유동적 공간인식은 특정 로컬에서 발생한 정치현상을 다른 국가의 로컬이나 내셔널·리저널·글로벌 스케일의 각 공간들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하는, 이른바 ‘스케일의 정치’라는 공간정치의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6) 마르쿠스 슈뢰르(2010), p.239.

7) 도린 매시 저,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원제: For Space)』, 삼산, 2016, p.197.

8) 요시하라 나오키(2010), p.70.

2. 경계의 재구성: '영역성'에서 '유동성'으로

어리는 글로벌화를 '영역'과 '유동'이라는 공간과 관련된 두 가지 은유(metaphor)로 잘 설명하고 있다.⁹⁾ 즉, 그는 글로벌화를 문화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적 '유동(성)'이 경계가 약화된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장악해가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어리가 특히 주목한 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기술과 인프라, 즉 모빌리티의 발전이다. 모빌리티의 증대로 인해 사람, 자본, 물자 등이 영역을 쉽게 초월하여 이동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이동을 예로 들면, 2020년 현재 국제이주민의 수는 2억 명이 넘어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¹⁰⁾ 이는 글로벌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던 1980년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¹¹⁾

국제이주민의 증가는 국민국가 영역성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 탈영역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의 이주민들은, 거주국에서 정착하는 삶을 지향하던 이전과 달리, 출신국과 거주국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삶을 영위한다. 모빌리티의 발전으로 인해, 출신국과 돌봄·부양·교육·애정 등과 같은 일상적 삶의 연계를 지속하면서 거주국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양국에 걸친 삶을 살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주에 기반 한 '영역성'의 사고로는 이러한 삶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증대는 영역성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이동의 증가는 영역성의 약화와 함께 영역성의 근간을 이루던 '경계' 자체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온다. 즉, 국민국가의 영역을 규정하던 국경으로서의 '경계'가 그 안과 밖을 구획하는 고정적·배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제 경계는 넘나들기(trans)가 허용되는 가변적·관계적인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게 된다. 전자가 경계를 넘어서는 차이들을 동질화하거나 배제하는 일종의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했다면, 후자는 다양한 차이들이 횡단하는 일종의 '통로'로서, 차이들이 섞여 새로운 혼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가진다.

영역성에서 유동성으로의 공간인식 전환은 위계적 '구조' 중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9) J. Urry,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2000, pp. 32-45.

10) <Migration Policy Institute>(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migration-data 검색일: 2023. 06.22.)

11) 존 어리(2014), p.307.

중심으로의 ‘공간질서’ 전환과 상통한다. 유동성, 즉 이동의 증가는 이동하는 각 결절(node)들을 잇는 네트워크(network)의 발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란 상호 연결된 결절들의 집합을 말하며, ‘공간질서’로서의 네트워크에서는, 위계적 구조가 고립성과 안정성을 가진 것과 대비되어, 가변적인 연결성(connectivity)과 관계성(relationality)이 중시된다. 이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의 증가는 배타적 경계 자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결성과 관계성에 기반 한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을 생산한다. 로컬의 장소들은 이제 국민국가의 영역성에서 벗어나(:탈영역화), 초국가적으로 연결된 수평적 네트워크에 새롭게 편입(:재영역화)되는 것이다.

알다시피, 초국가적 이동의 증대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발달로 이어지는 현상의 바탕에는 IT기술혁명을 비롯한 모빌리티 증대가 자리하고 있다. 카스텔(M. Castells)에 따르면, 극소전자혁명이 있기 전까지 네트워크는 수직적 위계조직보다 조직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네트워크는 유연성과 적응성 그리고 자기 조직적 특성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일정 규모를 넘어섰을 때는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비효율적인 조직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술을 비롯한 컴퓨터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일깨워 초국가적 스케일의 네트워크 사회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¹²⁾

Ⅲ. 근대적 시·공간 인식의 변용

1. 공간적 전환

초국가적 이동의 증대는 현실공간의 유동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 즉 시·공간에 대한 유동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유동성이 강화되는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식 및 지식의 유동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용기로서의 절대적 공간’,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 ‘진화론적 시간관’, ‘장소의 공간화’ 등¹³⁾으로 특징 지워지던 근대적 시·공간 인식이 ‘전환(turn)’이라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 즉 진보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발전된 공간과 뒤쳐진 공간을 순차적 시간에 따라 배치하거나, 공간 간의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

12) 마뉴엘 카스텔 지음,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옮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원제: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한울, 2003, p.95.

13) 이상봉, “근대적 시·공간인식과 국민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3호, 2022, pp.41-45 참조.

하여 몇 시간 떨어진 곳 등으로 인식하던 근대적 사고는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시·공간 축소·변형의 영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원거리 동시성의 증대는 시간이 가진 순차성이나 시간으로 환산되는 거리를 무력화하여 시간의 의미가 약해지며, 그 만큼 상대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커지는 것이다.

근대적 시·공간 인식이 공간을 주어진 절대·균질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현실의 정치공간은 다양성을 내포한 다중적인 것임이 점차 드러나게 된다. 르페브르(H. Lefebvre)가 일찍이 공간이란 사회적 삶의 ‘배경’이 되는 빈 용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잘 지적했듯이,¹⁴⁾ 공간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에 다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말대로, 공간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이는 다중적임과 동시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즉, 공간은 인간의 개입에 의해 확장하거나 축소하고, 균질화하거나 이질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권력관계로 점철된 정치적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공간정치의 관점이란 공간이 가진 이러한 정치·권력적 성격에 주목하여 공간적 사유를 통해 정치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간을 주어진 균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생산되는 다중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은 시간 우위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을 깨고 새롭게 공간에 주목하려는 인식 전환,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으로 이어졌다. 특히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시·공간의 변형, 즉 원거리 동시성에 따른 시간의 소멸과 공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현상과 결부되면서, 공간은 사회·정치현상의 분석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힘을 얻게 되었다.¹⁵⁾ 하비는 시·공간의 변형을 ‘시·공간의 압축’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압축되어 소멸하는 것은 시간일 뿐, 공간은 오히려 다중성을 드러내며 새롭게 확장·재구성된다. 근대의 ‘순차적 시간’을 대신하여 공간의 ‘동시적 병존’이 시·공간 인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¹⁶⁾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공간적 전환이란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가 반대로 ‘시간에 대한 공간의 우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과 공간을 중심-주변의 근대적 이분법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그 보다는 양자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근대적 시·공간 인식처럼, 공간을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동적인 것으로

14)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원제: La production de l'espace)』, 예코리브르, 2011, pp.127-143.

15) 도린 매시(2016), p.180.

16) 마르쿠스 슈뢰르(2010), p.191.

볼게 아니라 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상들의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이른바 ‘관계적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자는 것이다.¹⁷⁾ 오제(M. Auge), 푸코(M. Foucault), 제임슨(F. Jameson), 카스텔 등 공간적 전환에 주목하는 다수의 학자들도 공간의 우위를 바로 시간의 소멸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양자의 관계변화 또는 재구성에 주목하고 있다.¹⁸⁾

또한, 공간적 전환을 단순히 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 정도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공간적 전환, 즉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정치학이 공간을 바라보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국민국가라는 정치공간을 주어진 틀/framework로서 전제하는, 이른바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치학 분야에서 공간적 전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랜 동안 정치학을 지배해 온 ‘방법론적 국가주의’와 ‘발전론적 역사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전환을 방법론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장소의 복권과 재구성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공간과 대비되는 ‘장소’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다. 장소는 특정 집단이 공간에 뭔가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¹⁹⁾ 시계열로 보면, 장소의 의미 부각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국가라는 균질적 ‘공간’에 포섭되었던 다양한 ‘장소’가 다시 복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공간인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장소의 공간화’를 들 수 있었다면, 새로운 공간인식에서의 장소의 복권은 이른바 ‘공간의 장소화’로 대비시켜 나타낼 수 있다. 알다시피, 공간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장소와 대비시켜 사용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에 대비되는 ‘추상적인 공간’의 의미로 사용해 왔다.²⁰⁾ 공간이 가진 추상적·절대적 특성과는 달리 장소는 사람들의 기억이나 활동과 결부된 구체적·상대적 특성을 가지며, 이는 쉽게 복제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글로벌화는 초국가적 스케일로 균질한 공간을 확장해 가면서 동시에 차이의 장소들을 만들어 낸다. 즉, 한편에서는 자본의 힘이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17) 외르크 뒤링·트리스탄 틸만(2015), p.153.

18) 위의 책, p.147.

19)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장소(원제: Place: A Short Introduction)』, 시그마프레스, 2012, p.15.

20) 山崎孝史, 『政治·空間·場所』,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2013, p.37.

의해 지배되는 글로벌한 균질적 ‘공간’을 만들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내부의 균질적이던 로컬공간들이 차이를 드러내는 ‘장소’들로 새롭게 생산된다. 글로벌한 자본의 힘이 각 로컬들이 가진 차이를 발굴하여 자신의 구미대로 소비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카스텔은 글로벌화에 따른 공간 재구성을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과 ‘장소의 공간(space of places)’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²¹⁾ 즉, 사람, 물자,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공간’은 가변적이고 탈영역적인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공간이 확장될수록 고정적이고 영역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의 공간’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지만은 않고, 장소의 공간을 무력화해 가는 흐름의 공간에 저항하여 장소에 근거를 둔 사회운동에 의해 대안적 로컬화(localization)가 모색된다. 글로벌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는 ‘흐름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재생산은 여전히 로컬의 장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흐름의 공간’에 휩쓸리면서도 자신의 몸은 일상이 영위되는 로컬의 장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흐름의 공간’에 ‘장소의 공간’이 대항하는 구도가 다름 아닌 공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흐름의 공간’은 장소가 가진 고유의 속성을 없앤다는 점에서, 오제(M. Augé)가 말하는 ‘비-장소(Non-places)’를 만들어낸다. ‘비-장소’는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은 ‘순환의 공간’, 쇼핑몰과 같은 ‘소비의 공간’,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의 공간’ 등의 형태를 나타내며,²²⁾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머물게 되는 공간으로,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수명이 짧은 것이 그 특징이다. ‘흐름의 공간’의 확산은 이러한 ‘비-장소’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장소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초래한다. 즉, ‘공간의 장소화’에 의해 복권되는 새로운 장소는 이제 근대이전의 고정적·영역적·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관계들에 의해 재구성되는 수행적·유동적·관계적인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레스웰(T. Cresswell)은 “장소는 영역성에 갇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를 초월해 이동하고 확장되는 흐름의 산물로서, 세계의 다른 장소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부와 외부로 인도하는 경로를 통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²³⁾ 이 같은 장소에 대한 수행적·유동적·관계적 인식에서는 ‘장소’를 인간 활동에 불가피한 사회적 구성물로 파악하며 따라서 장소는 정치학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된다. 즉, 장소

21) M.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1996.

22) M. Augé,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 Verso, 1995, p.110.

23) 팀 크레스웰(2012), p.70.

를 통해 인간의 삶과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이 부각되는 것이다.

‘장소의 정치학’에 주목해 보면, 글로벌한 흐름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비-장소’의 확산이 로컬의 장소들을 유린하여 결국 인간 삶의 토대인 고유한 장소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카스텔이 ‘흐름의 공간’과 ‘장소의 공간’을 대비시킨 후, 후자를 저항정체성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흐름의 공간’에 의한 장소의 상실에 대항하기 위해 고유한 장소정체성을 오롯이 지켜가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한데다 공간의 탈근대적 변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보다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장소의 상실’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뿌리내린 장소’로서가 아니라 ‘이동하는 장소’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²⁴⁾ 흐름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비-장소’의 증가는 ‘장소의 상실’이 아닌 ‘장소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라 상실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뿌리내린 장소’라는 고정적·영역적·본질적 의미이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이동하는 장소’라는 새로운 인식, 즉 장소에 대한 수행적·유동적·관계적 인식을 통해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장소의 재구성 양상을 ‘장소의 정치학’이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

3. 모바일과 네트워크

모빌리티의 증대가 시·공간의 변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최근의 시·공간 변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의 증대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의 모빌리티 증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모바일전화와 네트워크컴퓨터의 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 원거리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기술은 ‘위치(location)’보다는 ‘경로(path)’를 중시하는 새로운 공간구성을 이끌고 있다. 즉, 고정된 ‘위치’의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기술이 유선전화였다면, 모바일전화는 이제 이동하는 사람과 사람을 ‘경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사람들을 고정적인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절(node)이 되게 한다.²⁵⁾ 모바일전화와 컴퓨터네트워크가 개인의 모빌리티를 극단적으로 증강시켜 이제 어디에 있더라도, 아니 이동 중에도 개인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위치’에 상관없이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²⁶⁾

24) 이상봉, “모빌리티의 공간정치학: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25권 1호, 2017, p.126.

25) 존 어리(2014), p.319.

시·공간의 변용과 관련하여, 모바일장치와 개인화된 네트워크는 기존의 장소가 가진 중요한 특성인 근접성 및 ‘공-현존(co-presence)’의 의미를 바꾼다. 사람들은 이제 굳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매개를 통해 동시에 같은 곳에 존재하는, 이른바 ‘연결된 현존’을 체험한다.²⁷⁾ ‘연결된 현존’은 그 범위는 글로벌하지만 내용은 기존의 근접한 관계처럼 미시적이고 일상적이다. 이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그리고 자주 연결되는 사람이 ‘근접한’ 사람이 된다. 근접과 원거리라는 거리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리(J. Urry)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한 원거리 동시성의 강화를 ‘즉시적 시간(instantaneous tim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²⁸⁾ 즉, ‘즉시적 시간’ 속에서는 거리나 스케일 등에 의해 구분되던 ‘공간적 거리’의 종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이는 공간적 거리와 같은 물리적 거리의 압축에 그치지 않고 ‘동시성’과 ‘즉시성’을 중시하는 ‘미학적 거리’의 변화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네트워크가 거리의 제약을 넘어 무한대로 확장되기 이전에는 수직적 위계구조가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졌다. 네트워크는 유연성과 수평적이고 자기 조직적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장비의 발전은 네트워크가 가진 규모에 의한 제약을 제거하여 그 잠재력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게 했다. 네트워크는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결절(node)의 집합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가상의 공간에서 동일한 프로토콜이나 코드를 공유하는 한 새로운 결절을 통하여 수평적으로 무한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된 결절의 집합일 뿐 그 내부에 중심-주변의 권력적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확장은 위계에 근거한 기존의 권력관계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공간은 실제공간과 구분되는 가상공간이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을 잇는 경계지점이 된다. 몸은 항상 특정한 실제공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도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몸이 실제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경로라는 점에 주목하면, 가상공간이 확장될수록 몸이 자리한 실제 공간, 즉 장소의 의미 또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어디서 연결되고 있는지의 상태, 즉 연결되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26) 위의 책, p.314.

27) 위의 책, p.384.

28) 위의 책, pp.224-225.

이다. 흔히 모바일 전화통화의 첫마디는 ‘거기 어디냐?’이며, 이방인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만나는 사람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자주 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²⁹⁾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소가 모바일과 네트워크라는 최신 모빌리티의 특성에 의해 재구성되듯이, 모바일과 네트워크 또한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간다. 즉, 모빌리티가 증대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장소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하비(D. Harvey)의 말대로,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장소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세계시민인가? 국민인가, 로컬인인가? 아니면 사이버 공간을 헤매는 가상적 존재인가?³⁰⁾

IV. 국민국가공간의 재구성

1. ‘대의’의 공간에서 ‘참여’의 공간으로

알다시피, 이성과 진보를 기치로 내건 근대성의 기획은 국민국가라는 확장된 스케일의 정치공간을 토대로 삼아 구체적인 정치·사회질서로 제도화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성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형태로는 대의민주주의, 시민권, 국가적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된 형태들은 후기근대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제도화된 형태들이 어떤 변화, 즉 어떤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어떤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근대의 민주주의가 대의제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국민국가라는 공간스케일과 관련이 깊다. 즉, 국가라는 확장된 스케일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데다가, 근대 계몽주의가 지향하는 ‘전문성의 원리’를 좇아 정치를 전문지식을 갖춘 정치가가 국민을 계도하여, 이른바 ‘통치(government)’를 행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³¹⁾ 밀(J. S. Mill)이 대의제란 계몽된 소수가 다수에 대해 책무를 갖는 제도라고 설명했듯이,³²⁾ 대의민주주의의 선택에는 정치란 식견을 갖춘 정치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일반 국민은 그러한 식견을 가진 자를 알아보고 뽑을 정도의 능력만을

29) 마르쿠스 슈뢰르(2010), p.251.

30) D. Harvey(1996), p.246.

31) 이상봉(2022), p.53.

32) J. S. Mill, *Three Essays: 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 The Subjection of Wom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214-216.

가질 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대표자를 뽑는 일이 거의 유일하다시피하기 때문에 선거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된다. 그런데 정치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들을 뽑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정치를 대상화하여 대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약화시켰다. 즉, 대중사회에 접어들면서 유일한 정치행위라 할 수 있는 투표에마저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게 되어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참여의 부재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와 선출방식의 불공정성에 따른 ‘대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참여의 부재에서 찾게 되면, 주권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른바 ‘참여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부각된다. 참여민주주의는 ‘스케일’과 ‘원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즉, 대의민주주의가 국민국가라는 확장된 스케일을 ‘단위’로 삼고 있으며 정치를 선거에서 뽑힌 탁월한 전문정치인이 행하는 ‘통치’로 보고 있는데 비해, 참여민주주의는 축소된 스케일의 로컬 커뮤니티를 주된 ‘단위’로 삼고 있으며 정치를 자신의 일상적 삶과 관계된 일들을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인식하고자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대안적 가능성을 ‘스케일’과 ‘원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케일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국민국가라는 확장된 공간단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듯이, 참여민주주의는 지역사회라는 구체적 생활공간을 주된 공간단위로 삼는다. 지멜(G. Simmel)이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영역을 공간적으로 좁게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듯이,³³⁾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소(:근접활동)에 기반한 결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국민국가공간의 탈근대적 변용, 즉 정치공간의 중층·다원화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로컬-내셔널-글로벌 스케일의 공간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중층·다원적 공간구성이 참여에 기반한 로컬공간의 이니셔티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공간의 중층·다원화가 반드시 로컬공간의 가능성 증대로만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간의 유동성 증대는 근접성(:대면활동)에 기반한 지역사회활동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퍼트남(R. Putnam)이 근접한 지역사회 내부에서 공적인 일에 참여함으로써 육성된다고 본 이른바 ‘사회적 자본’은 모빌리티가 증대

33) G. Simmel,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Gesamtausgabe Band 11, in Otthein Rammstedt(Hg), Frankfurt/M, 1992, p.747.

되어 유동적인 거주자들이 늘어날수록 약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³⁴⁾ 모빌리티의 증대가 사회적 자본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장소를 고정적·영역적·본질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인식에 따르면, 일면 타당하다고도 여겨진다. 하지만 장소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행적·유동적·관계적인 것으로 새롭게 인식한다면,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의 급증은 오히려 ‘사회적 자본’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되는 신뢰와 호혜는 근접성(:대면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거리(:비대면) 활동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형성되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자본’과 대비시켜 ‘네트워크 자본’이라고 명명한다.³⁵⁾ 모빌리티의 증대가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탈영역적인 공간구성의 변화는 정치원리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온다. 즉,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국가단위의 중앙정치에서 행해지는 ‘통치’로 좁게 보던 것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쟁점들을 참여를 통해 해결해 가는 ‘거버넌스’로 확장하여 인식하게 한다. 공간구성이, 정치원리를 전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플랫폼이 바뀌면 정치원리도 변하기 때문이다. 즉, 영역성에 기반 한 국민국가공간이 ‘통치’라는 정치원리와 잘 부합했다면, 탈영역적인 네트워크에 기반 한 로컬 및 글로벌 공간에서는 ‘거버넌스’라는 정치원리가 작동하기 용이하다. 동질적 위계조직의 관리에 효과적인 ‘통치’와는 달리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통해 일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행하는 로컬공간이나 수평적 행위자들이 국경을 횡단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글로벌 공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는 어떤 문제(:일)이든 그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협의하여 해결하는 정치원리라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중시하는 ‘당사자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양도불가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는 인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당사자주의는 일상의 삶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된 쟁점이 되는 지역사회 스케일, 즉 생활정치공간에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공간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실행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때 당사자주의가 스케일 확장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른바 ‘보완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근접한 지역사회 스케일에서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하고, 그 스케일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서만 점차 확

34) R. Putnam,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p.205.

35) 존 어리(2014), p.363.

장된 스케일에서 이를 보완해 가는 원리를 말하며, 그 핵심은 “어느 단위도 절대화되지 않고 각각의 존재사유를 완수하면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문제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거버넌스’는 중층·다원적 공간구성에 부합하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탈영역적인 새로운 공간구성에 걸 맞는 대안적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2. 시민권의 다원화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란 특정 국가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국민(nation)을 국가(state)라는 정치공동체로 묶어낸 것이다. 이 때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동질적 특성을 공유한 자들에게만 그 자격, 즉 국적(nationality)이 부여된다. 근대국민국가는 성립 당시 두 가지 측면, 즉 공통의 혈통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한 운명공동체라는, 이른바 ‘에스노스’(ethnos)의 측면과 계약(:합의)에 의해 공통의 법치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이른바 ‘데모스(demos)’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³⁷⁾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의 민족이 영토를 매개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기에, 국민이란 동일한 민족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공통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즉 ‘에스노스’와 ‘데모스’가 결합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근대 국민국가가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자격, 즉 국적은 선거권의 의미를 가진 시민권(citizenship)과 결합되게 된다. 즉, 정체성으로서의 국적과 권리로서의 시민권이 결합하여 ‘국가적 시민권’이라는 근대적 시민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마셜(T. H. Marshall)이 시민권을 “어떤 공동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이에 의해 갖게 되는 평등한 권리 및 의무”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³⁸⁾ 국민의 자격은 통상 시민권의 소지 여부에 의해 가려졌으며, 국민국가는 이러한 시민권의 독점적 관리(:통제)를 통해 그 영역성, 즉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확립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모빌리티의 증대에 힘입은 초국가적 이동의 확산은 ‘영역성’과 ‘정주주의’를 토대로 성립한 기존의 시민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정치공간의 중층·다원화

36) 遠藤乾, “日本における補完性原理の可能性”, 山口二郎·遠藤乾 外 編著,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方ガバナンス』, 岩波書店, 2003, p.262.

37) E. Geller,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39.

38) T. H. Marshall·T. Botto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 p.18.

에 따라 국민국가 영역성이 약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하는 삶의 확산에 따라 ‘정주주의’가 쇠퇴하면서 ‘국가적 시민권’에 균열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시민권과 국적이 결부된 국가적 시민권의 사고로는 국적과 시민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초국가적 이주자의 삶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게 된다. 거주국에서 정착해 살기를 바라고 출신국을 떠났던 종래의 이민자들과 달리,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의 대다수는 출신국과의 연계를 단절하지 않고 출신국과 거주국을 오가는 초국가적인 삶을 살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의 급격한 증대로 초국가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벤하비브(S. Benhabib)의 지적대로,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초국가적 이동의 확산이 전반적인 ‘시민권의 쇠퇴(decline of citizenship)’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³⁹⁾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권의 쇠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고 있다. 즉, 하나는 기존의 국민국가 틀을 유지한 채, 국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권의 쇠퇴를 계기로 초국가적 이주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재구성하자는 흐름이다. 전자의 경우, 하버마스(J. Habermas)가 말하는 ‘헌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와 같이,⁴⁰⁾ 시민권이 가진 두 가지 측면, 즉 에스노스와 데모스의 측면을 분리한 후, 데모스의 측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즉, 이는 시민권의 법적·정치적 권리로서의 측면에 주목하여, 헌법과 같은 정치공동체 구성의 최고원리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면, 개인이나 집단의 에스닉 특성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국가가 점차 다문화적인 구성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정치적 통합을 지켜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킴리카(W. Kymlicka)가 제창한 ‘다문화적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과 같이,⁴¹⁾ 시민권이 가진 에스노스의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국가적 시민권이 가진 한계를 다양한 에스닉 소수자들의 권리를 포용하는 방식, 즉 시민권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킴리카 이외에도, 옹(A. Ong)이 주장한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 1999)’, 히트(D. Heater)의 다중 시민권(multiple citizenship, 1990),

39) S.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114.

40) J. Habermas,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ited by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0, p.117.

41) W.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영(I. M. Young)의 ‘차별화된 시민권(differentiated citizenship, 1989)’ 등 시민권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일련의 논의들은 초국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주자들의 실천이 만들어내는 시민권의 변화 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국민국가의 영역성 약화는 이에 기반 하여 형성된 ‘국가적 시민권’에도 균열을 가져오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공간 스케일의 중층·다원화는 이에 부응하는 다층적 시민권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즉, 기존의 국가적 시민권의 위와 아래에 ‘글로벌 시민권(global citizenship)’과 ‘로컬 시민권(local citizenship)’이 자리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은 중층적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EU를 들 수 있다. 알다시피, EU가맹국가의 모든 국민에게는 초국가적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연합 시민권(Union citizenship)’이 부여되어, 이들은 국적에 관계 없이 EU 내의 어느 곳에서나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EU의회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참정권을 가진다.⁴²⁾ 비록, 초국가적 스케일의 시민권인 ‘연합시민권’과 하위 스케일의 시민권인 ‘지방참정권’의 부여 자격이 EU가맹국의 국민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국민국가의 규정력, 즉 ‘국가적 시민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각 층위의 스케일에 따라 각기 다른 시민권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EU가 이러한 다층·다원적 시민권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초국가적 이주의 확산이라는 현실상황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다층적 시민권과,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로컬 스케일에서의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이른바 ‘로컬 시민권(local citizenship)’에 관한 논의이다. 흔히 지방참정권으로 표현되는 로컬 시민권은 권리 부여의 근거가 국가적 시민권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국가적 시민권이 ‘국적’이라는 국가 구성원 자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로컬 시민권은 특정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하마르(T. Hammar)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사실상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데니즌(denizen)’이라 명명하고, 이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로컬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데니즌십(denizenship)’을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³⁾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많은 유럽지역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주하고 있는 데니즌이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국적과 결부되

42) S. Benhabib,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66/3, Graduate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9, p.717.

43) T. Hammar, “State, Nation and Dual Citizenship” in W. R. Brubaker(ed.),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am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지 않는 새로운 시민권으로서의 ‘로컬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시민권’에 있어 중대한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로컬 시민권의 논의는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온 국가적 시민권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국적을 버릴 필요가 없이 국가적 권리는 국적국에서 행사하고 거주지에서는 거주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컬-내셔널-글로벌 스케일의 층위로 정치공간이 중층·다원화 하는 것에 부응하는 형태로 시민권 또한 ‘거주’에 근거한 ‘로컬 시민권’, ‘국적’에서 연동하는 ‘국가적 시민권’ 그리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글로벌 시민권’이 서로 경합하면서 중층·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의 다원화이다.

3. 공공성의 재구성

어떤 공동체이든 공동성의 원활한 수행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공동체들은 모두 나름의 공동성 수행방식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대 국민국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시스템(:제도)에 의해 공동성을 수행하는, 이른바 ‘국가적 공공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⁴⁴⁾ 알다시피, 근대 이전에는 공동성이 주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즉 공동의 활동을 통해 수행되었지만, 스케일을 크게 확장한 국민국가는 더 이상 공동활동을 통한 공동성 수행이 불가능하였기에 추상적 규범에 근거한 제도, 이른바 ‘시스템(system)’에 의해 공동성 수행을 도모하게 된다. 즉,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이성적 규칙(rule)을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공동활동이 없이도 공동성이 수행되는 것이다.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의 국가적 공공성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라는 추상적 공간구분을 전제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⁴⁵⁾ 즉, 주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에 의해 출현한 근대국가는 그 존속을 위해서는 공동성의 수행이 필요하지만, 공동성을 앞세우면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하자, 이를 공적영역(:국가)과 사적영역(:시장)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근대 이전의 삶에서 뒤섞여 있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분리하여, 공적영역은 국가가 개입하여 엄격히 규제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사적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허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대적 공공성이란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공적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시스템을 통해 공동성을 수행하는 방식

44) 이상봉(2022), pp.57-59 참조.

45) A. Smith, *Lectures on Jurisprudence*, 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London: Oxford, 1978, p.418.

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후기 근대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공공성은 ‘주체’와 ‘영역’ 그리고 ‘스케일’의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즉, 공공성 수행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이어야만 하는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또 구분할 수 있는가? 국가 스케일은 다양해진 공공성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너무 크지 않은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다시피, 국민국가라는 확장된 스케일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공통의 법(:제도)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공동성을 수행하던 ‘국가적 공공성’은 공간의 내부가 동질적이고 또 공적/사적 공간의 구분이 명확할 때 잘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빌리티의 증대에 따른 공간 변용은 내부에 다양하고 혼종적인 공간들을 생산하며, 공적/사적공간의 경계 또한 허물어간다. 공적인 광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성의 한 가운데 사적인 섬이 탄생하는 것처럼,⁴⁶⁾ 공간의 중층·다원화는 국가적 공공성의 토대를 뒤흔들어 위기를 낳게 되는 것이다.

공공성 수행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 동안 국가조직, 즉 관료시스템이 공공성을 담당하면서 드러낸 ‘비민주성’ 및 ‘비효율성’의 문제에서 비롯한다. 즉, 앞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와 대표성을 결여한 대의제 조직은 ‘무엇이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비민주성’을 노정했으며, 결정된 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성을 결여한 관료시스템은 민간(:시장)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관료시스템이 드러낸 비효율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민영화’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영화만으로는 ‘비민주성’ 문제의 해결, 즉 민주적 공공성을 담보해 내기 힘들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대변하는 ‘국가’와 ‘시장’ 이외의 새로운 공공성 수행의 주체가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생각하자면, 일찌감치 공공성을 권역(sphere)이라는 공간적 은유를 통해 파악한 하버마스(J. Habermas)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62년에 출판한 저서 <공공권의 구조변동>에서 근대초기 부르주아들이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관심사를 논의하던 자율적 공간을 부르주아 ‘공공권(public sphere)’으로 개념화한 후, 이러한 자율적 공간이 국가(:권력)나 시장(:자본)시스템과 같은 역학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대규모 조직에 의해 조작되게 된 상황을 부르주아 공공권의 붕괴로 표현한 바가 있다.⁴⁷⁾

나아가 하버마스는 1990년에 쓴 신판 <공공권의 구조변동>의 서문에서, 붕괴한 부르

46) 마르쿠스 슈뢰르(2010), p.264.

47)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환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pp.286-292.

주아 공공권을 대신해 시민사회에 기반 한 ‘시민적 공공권’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공간(:국가)과 사적공간(:시장) 사이에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를 두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새롭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다.⁴⁸⁾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민사회란 공적공간인 국가와 사적공간인 시장 사이에 있는 비(非)국가·비(非)시장적인 공간으로, 사적영역인 시장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기에 시장의 장점인 효율성을 가지지만, 개인이 아닌 공동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적’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스케일의 측면에 주목하면, 공공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일상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는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거대하고 획일적인 국가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해진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점차 힘들게 되었다. 즉, 기존에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던 육아, 교육, 돌봄 등의 일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공적영역(:공공성)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이슈들은 국가스케일의 획일적 시스템보다는 각 로컬스케일 별로 차별화된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나카(田中重好)는 일상생활과 관계된 이슈들을 다루는 공동성을 ‘근원적 공동성’과 구별되는 ‘장소의 공동성’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장소를 공유하는 로컬공동체 단위에서 수행되는 대안적 공공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⁴⁹⁾

이처럼 공공(公共)을 기존의 국가 중심의 공(公)과 구분되면서, 사적영역에서 발견되는 공동활동, 즉 공(共)을 포함하는 대안적 의미로 새롭게 인식하면, 공공성은 ‘주체’, ‘영역’ 그리고 ‘스케일’의 측면에서 재구성되게 된다. 즉,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와 함께 다양한 ‘자율결사체(associations)’가 공공성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며, 영역의 측면에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사이에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제3의 영역’ 또는 ‘제3섹터’가 부각되고, ‘스케일’과 관련해서는 국가스케일의 시스템에 의한 공공성 수행과 병행하여 로컬스케일에서의 공동활동에 기반 한 공공성 수행, 이른바 ‘로컬 공공성’을 모색하는 것이 공공성 재구성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처럼, 공공성의 재구성이란 기존의 국가적 공공성이 시민적 공공성이나 로컬 공공성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중중·다원화되는 정치 공간에 부응하는 형태로 각 층위 및 주체 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보아야 한다.

48) 위의 책, p.51.

49) 田中重好, 『地域から生まれる公共性—公共性と共同性の交点』, ミネルバ, 2010, pp.70-71.

V. 마치면서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글로컬화로 상징되는 국민국가의 공간적 변용, 즉 영역성의 약화는 자본의 욕구를 내면화한 모빌리티의 획기적 증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international)적 공간구성은 로컬-내셔널-글로벌 스케일의 중층적 공간들이 서로 넘나드는 트랜스-로컬(trans-local)적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이러한 스케일 간을 교차하는 권력관계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공간정치의 관점이 필요함을 논구하였다. 또한 영역성의 약화는 ‘경계’에 대한 인식변화, 즉 ‘영역(성)’ 중심에서 ‘유동(성)’ 중심으로의 경계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유동성에 기반 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공간질서를 강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실공간에서의 유동성 증대가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옴을 고찰하였다. 즉, ‘장소의 공간화’ 및 ‘공간의 시간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던 근대적 공간인식이 ‘공간적 전환’, ‘장소의 재구성’ 그리고 ‘모바일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유동적 공간인식으로 바뀔을 논구하였다. ‘공간적 전환’에서는 공간을 사회·정치적으로 생산되는 ‘관계적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동안 ‘국가 공간’에 집착해 온 정치학이 공간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장소의 재구성’에서는, 글로벌한 ‘흐름의 공간’이 로컬에 기반 한 ‘장소의 공간’을 무력화해가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조류 속에서, ‘장소의 공간’이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흐름의 공간’에 대항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이른바 ‘장소의 정치’라는 공간 정치의 관점이 필요함을 논구하였다. 그리고 ‘모바일과 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모빌리티 발전의 중요한 특징인 ‘모바일’ 및 ‘네트워크’가 ‘근접성’이나 ‘공·현존’과 같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시·공간 인식을 네트워크를 통한 원거리 동시성과 같은 ‘연결된 현존’으로 바꾸어 감을 논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시민권’, ‘국가적 공공성’으로 제도화된 근대성의 정치원리들이 공간의 중층·다원화와 함께 ‘참여 민주주의’, ‘시민권의 다원화’, ‘대안적 공공성’으로 재구성됨을 논구하였다.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대의제와 이에 근거한 ‘통치’라는 정치원리가 국가라는 공간스케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대안으로 제시되는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라는 정치원리는 로컬스케일 및 관계적 공간인식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시민권’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국가 배타적 영역성의 토대가 되었던 ‘국적’과 연동된 ‘국가적 시민권’은 초국가적 이동의 증대와 함께 균열을 나타내면서, 공간의 중층·다원적 재구성에 부응하는 형태, 즉 로컬-내셔널-글로벌 시민권으로 중층·다원화됨을 논구하였다. 그리고 공동

성의 근대적 수행방식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적 공공성’은 공간의 중층·다원화와 함께 ‘주체’, ‘영역’, ‘스케일’의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하여, 주체에 있어서는 ‘자율결사체’, 영역에 있어서는 ‘제3섹터’ 그리고 스케일에서는 ‘로컬공동체’가 국가와 함께 공동성을 수행하는 ‘대안적 공공성’이 모색되고 있음을 논구하였다.

참고문헌

- 도런 매시 저,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원제: For Space)』, 심산, 2016.
- 마누엘 카스텔 지음,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옮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원제: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한울, 2003.
- 앙리 르페브르 지음,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원제: *La production de l'espace*)』, 에코리브르, 2011.
- 외르크 뒤랑·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원제: *Spatial Turn*)』, 심산, 2015.
- 요시하라 나오키 저, 이상봉·신나경 역, 『모빌리티와 장소(원제: *モビリティと場所*)』, 심산, 2010.
- 위르겐 하버마스 저,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 이상봉, “근대적 시·공간인식과 국민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3호, 2022.
- 이상봉, “모빌리티의 공간정치학: 장소의 재인식과 사회관계의 재구성”, 『대한정치학회보』 25권 1호, 2017.
- 존 어리 지음, 강현수·이희상 옮김, 『모빌리티(원제: *Mobilities*)』, 아카넷, 2014.
- 팁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장소(원제: *Place: A Short Introduction*)』, 시그마프레스, 2012.
- Augé, M., *Non-Places: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London: Verso, 1995.
- Benhabib, S.,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66/3, Graduate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9.
- Benhabib, S.,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Castells, M.,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1996.
- Geller, E., *Nations and Na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iddens, A., *Konsequenzen der Modern*, Frankfurt: M, 1995.
- Habermas, J., *The inclusion of the other: studies in political theory*. edited by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0.
- Hammar, T., “State, Nation and Dual Citizenship” in W. R. Brubaker(ed.),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 Harvey, D.,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Blackwell, 1996.
- Heater, D.,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1990.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1995.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Marshall, T. H.・Bottmore, T.,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
- Mill, J. S., *Three Essays: On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 The Subjection of Wom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Ong, 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 Putnam, R.,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 Simmel, G.,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Gesamtausgabe Band 11, in Otthein Rammstedt(Hg), Frankfurt/M, 1992.
- Smith, A., *Lectures on Jurisprudence*, 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London: Oxford, 1978.
- Urry, J.,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Routledge, 2000.
- Young, I. M.,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99/2, 1989.
- 山崎孝史, 『政治・空間・場所』,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2013.
- 遠藤乾, “日本における補完性原理の可能性”, 山口二郎・遠藤乾 外 編著,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方ガバナンス』, 東京: 岩波書店, 2003.
- 田中重好, 『地域から生まれる公共性—公共性と共同性の交点』, 東京: ミネルヴァ, 2010.
- 〈Migration Policy Institute〉(<https://www.migrationpolicy.org/programs/migration-data> 검색일: 2023. 06.22.)

【 Abstract 】

Spatial Transformation and Postmodern Reconstruction of Nation–States
: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Politics

Lee, Sang Bong

It is difficult for humans to escape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pecific time and space in which they exist. Therefore, if we pay attention to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we can grasp the change in the existence of humans and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interest in space was overlooked because the modern order was formed based on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as ‘the primacy of time over space.’ However, since the mid-1990s, with the so-called ‘spatial turn’ as an opportunity, a tendency to newly pay attention to ‘space’ that has been overlooked in the field of social theory is spreading. In other words, with the prevalence of so-called ‘space discourse’, various social phenomena related to space, such as ‘space politics’, ‘politics of place’, and ‘politics of scale’, are being dealt with under the name of politics.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terest in space in the field of politics that deals with political phenomena. In accordance with these concern,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state in the late modern era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politics’. Specifically, first, the causes and aspects of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state are considered, paying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mobility. Second,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obility and its meaning are analyzed. Third, it is considered how the modern order institutionalized by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hip’, and ‘national publicness’ is reconstructed according to spatial transformation.

Key Words : Nation-state, Spatial transformation, Spatial politics, Mobility, Citizenship, Publicness.

• 논문투고일 : 2023년 7월 13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8월 12일

